



# 보도자료

3월 29일(화요일) 14시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배 포 일	2022. 3. 29.	사진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진있음 <input type="checkbox"/> 매수 : 3 매		
담당	균형발전연구실 통일·북방연구센터	집필자	양 철 책임연구원	yangchul@rig.re.kr 033-250-1346

## 강원도 접경지역, 대통령 공약이행률 30% 이하 강원연구원, 대통령 당선인 공약 분석 보고서 발간

- 역대 대통령 공약 중 강원도 접경지역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통일국방, 지방분권, 경제산업 분야의 평균 공약이행률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강원연구원(원장 직무대행 김석중)은 “공약(公約)과 공약(空約) 사이 : 대통령 공약과 강원도 접경지역의 과제” 보고서(RIG 브리프 제21호)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강원권 공약과 국정 공약에서 접경지역 관련 공약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강원도와 접경지역의 대응 방향을 제안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역대 대선후보의 강원권 공약은 정당이나 시기와 관계없이 유사하고 반복되는 패턴이 지속되고, 이행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며, 취지와 목적의 실현도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접경지역은 지난 10여 년 동안 36건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지 못했고, 남북관계의 호전에도 발전이 제한되었으며, 중앙정부의 미래전략에서도 소외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 강원권 공약 중 경제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하여 “평화”의 가치를 부여하는 형태는 가능하나 명칭에 “평화”라는 표현이 들어가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차기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특별자치도가 무엇인지, 경제특별자치도와 평화가 어떠한 접점이 있는지, 이를 경제특별자치도에 녹여낼 대안은 무엇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국정 공약에서는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민군상생 복합타운” 건설, 차박명소 발굴, 탄소중립과 필수 에너지 복지 확대, “이주 활성화지역” 등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 먼저, 국익과 원칙을 강조하는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 임명은 문재인 정부와 전혀 다른 남북관계 구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남북의 직접적인 교류협력 사업보다 향후 교류협력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 또한, 필수지역을 제외한 전면 해제를 통해 관광단지·산업단지 등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민군상생 복합타운”에 대한 사전 검토와 한국형 3축 체계 구축관 관련해 사드 추가 배치 지역으로 접경지역이 지정되는 상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논리 개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 이와 함께,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에 발맞춰 특정 사업의 유치에 전념하기보다 캠핑(차박)-농업-관광

-디지털 전환·에너지 전환(복지)-탄소중립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빅블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 양철 책임연구원은 “윤석열 당선인이 새롭게 제시한 공약을 구상한 정책 입안자(policy maker)를 찾아 개념과 방향성, 사업방안 등의 확인이 선결되어야 하며, 중앙정부가 광역자치단체에 예산 배정을 위한 사업 제출을 억제할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강원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ig.re.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

첨부. RIG 브리프 제21호(공약(公約)과 공약(空約) 사이 : 대통령 공약과 강원도 접경지역의 과제)